

'복지' 보다 '경기 회복'에 초점...국회 치열한 '예산 전쟁' 예고

예산안 국회 통과할까

여야 대치정국에 결산심사 지연

법정 의결시한내 통과 어려울 듯

정부가 26일 발표한 2014년도 예산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한 대선 공약이었던 '복지' 쪽보다는 '경기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정부는 이런 노력을 통해 경기가 회복되면 세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복지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면 계산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계획이 실효성을 거둘지는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글로벌 경기가 여전히 불투명한데다 가계부채 등 내부 문제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의 기초로 삼은 3.9% 경제 성장 전망치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일부 복지 공약 후퇴로 인한 여야 갈등으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경기 회복 위한 재정 투입 국대회=정부는 재정 지출은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 투입됐다. 투자 촉진 차원에서 정책금융 자금을 24조3000억원 확대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에 1조3073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2조8273억원을 투입해 재정지원 일자리 64만6000개를 만들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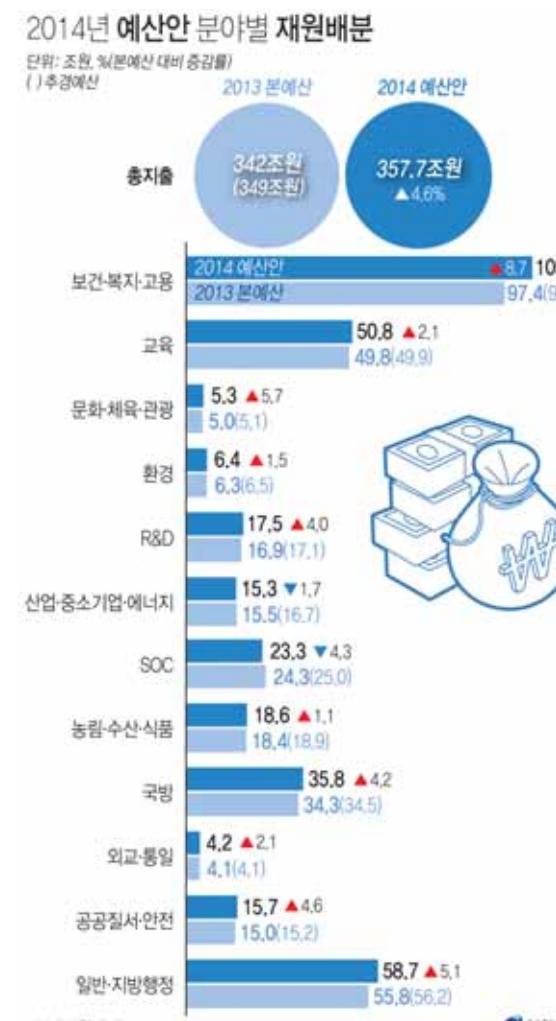
반면, 복지분야 예산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지만 박 대통령이 내건 복지공약에 비해서는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회 처리 전통 예상=새해 예산안은 내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되며, 이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박근혜정부가 편성한 첫 번째 예산안이라는 상징성이 큰 만큼 국회 심사 과정에서의 여야 간 신경전이 날카로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복지 예산을 놓고는 첨예한 공방이,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놓고는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맞물려 어느 때보다 치열한 맹활약이 예상된다.

우선 여야는 이번 예산안의 최대 맹점인 복지공약 지원을 놓고 정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복지공약의 수위를 낮춘 것과 관련, 새누리당은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했지만, 민주당은 "복지 예산 확보를 위해 '예산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



자료/기획재정부

장이다.

특히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논란 등 각종 정치 쟁점으로 촉발된 지금의 여야 대치정국이 쉽게 풀리지 않고 있어 한 후 예산처리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회법상 국회는 8월말까지 전년도 결산안을 처리한 뒤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을 본격적으로 다뤄야 하지만, 여야는 아직 결산심사에 착수조차 하지 못했다. 결산심사 지원 속에 대정부질의·국정감사 등 다른 정기국회 일정이 연쇄적으로 밀리는 상황이다 보니 예산안 심사는 일려야 11월 중순에야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번에도 새해 예산안은 현법상의 법정 의결시한(12월 2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기자 jpark@kwangju.co.kr

문화전당 콘텐츠 개발 443억...추가 확보 시급

문화·체육·관광 예산

내년에는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개발과 예술인 복지와 문화예술 지원, 체육·관광 인프라 확충 등 문화 분야에 대한 투자가 증가한다. 또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는 사후 정산방식으로 보충지원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분야 내년 예산은 올해 5조원에서 5조3000억원으로 5.7% 늘어난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8.7% 증가)를 제외하면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이다. 박근혜 정부가 핵심

2015 광주 U대회

사후정산 방식 보충지원

과제로 내건 '문화재정 2% 달성을' 위해 첫발을 내딛는 셈이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아시아문화전당의 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사업비 가 올해 71억원에서 443억원으로 6배 이상 확대된 것이다. 다만, 아시아문화전당 주진단 등은 문화전당이 콘텐츠를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 2500억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추가 예산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또 예술인복지사업 규모를 올해 100억원에서 내년 200억원으로 확대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도 올해 1223억원에서 내년 1875억원으로 53% 늘리기로 했다. 영화·계엄·음악 등 5개 '킬러콘텐츠'를 지원하는 쪽에서도 올해 1841억원에서 2320억원으로 투자가 크게 늘어난다.

체육분야에서는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2015년 광주U대회는 사후 정산방식으로 보충지원할 계획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호남고속철 1조1270억...내년 완공 무난

광주지하철 2호선·흑산도 소형공항 반영

박근혜 정부는 애초 공약가계부를 통해 SOC 분야에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11조6000억원을 구조조정 보류했다. 2014년 예산안에 나타난 내년 SOC 분야 세출 규모는 23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본예산인 24조3000억원보다 1조원(4.3%) 줄었다.

- 김종우



전체 29.6% 차지...재원 부족으로 축소

복지예산 100조 시대

2014년 정부 예산안은 핵심 이슈는 복지예산이다.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본인부담금, 경감 등 대표적 복지공약이 재원 부족으로 사실상 수정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복지예산을 둘러싼 논란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격화되는 양상이다.

◇복지예산 105조9000억...복지예산 비중 역대 최대=2014년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 규모는 총 105조9천억원으로 전년도 97조4000억원보다 8.7% 늘어 편성했다. 분야별 증가율은 전년도 비중에 차지하는 비중도 29.6%로 역대로 가장 높았다. 전년도 비중은 28.5%였다.

◇생애주기·수혜대상별 및 출현형 복지 지원=내년도 복지 예산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 지원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할 수 있다. 우선 양육·보육, 학비, 주거 등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복지수요를 맞춤형으로 확충한다.

영유아 지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1회당 5000원인 어린이 필수예방접종의 본인부담금을 폐지, 전국 12세 이

하 600만명이 B형 간염과 수두 등 11개 백신을 무료로 접종할 수 있게 된다.

전 계층을 대상으로 보육료, 양육 수당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국공립 어린이집을 121개 늘린다.

장년·노년층 지원책으로는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내년 하반기 도입한다.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과 관련해 건강보험료가 적용되는 필수 의료서비스는 2016년 까지 확대하고, 임플란트의 건강보험료 급여화도 내년 75세부터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한다.

주거급여를 내년 10월 주택바우처 제도로 전환, 지급대상을 73만 가구에서 94만4000가구로 늘리고 임대료 지원도 연 96만원에서 연 13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택구입·전세 자금도 1조7000억원 증가한 9조4000억원이 배정됐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체계로 전환해 수급자가 83만가구에서 110만 가구 수준으로 30% 확대하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완화해 12만명을 추가로 보호대상

복지 수요별 서민·중산층 주요 혜택

	2013		2014	
	본인부담금 폐지	연 5만원(1회, 5천원) (0세 기준)	연 10만 원~906만원 1인당 연 120~240만원	지자체 부담 완화로 안정적 무상보육 기반구축
보육·양육	보육료	1인당 연 264~906만원	1인당 연 450만원	1학년부터 시행
	양육수당	1인당 연 120~240만원	연 90~450만원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대학교육비	셋째 아이	-	연 450만원	연 10월 시행
	대학생 장학금	연 67.5~450만원	연 90~450만원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의료비	4대 중증 질환	본인부담 연 94만원 (2016 제도개선 관료화)	본인부담 연 최대 34만원 (2016 제도개선 관료화)	75세 이상
	임플란트	1개당 150~300만원 부당(관행수기 예상)	1개당 75~150만원 부당	연소득 3,800만 원 이하
본인부담금 폐지	본인부담 상한제	200~300만원 부당	120~250만원 부당	연소득 3,800만 원 이하
장애인 지원	주택 바우처	연 90만원 (주거급여)	연 130만원 (주택 바우처)	2014.10월 시행
소득지원	사행봉급	연 140만원	연 162만원	상병기준
	기초연금	연 120만원	연 최대 240만원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장애인 연금	연 120만원	연 240만원	중증장애인 소득 하위 70%

※2014년 계획

키로 했다.

장애인연금은 협행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두 배로 늘어난다.

◇저소득층 자활 지원 강화...복지 행정 효율화=저소득층의 저축을 돋는 '희망기금통장' 사업을 차상위 계층으로 늘려 1만 가구를 신규로 지원

기금을 확장하는 협력이다.

Vitamin House
www.vitamin-house.com



비타민하우스
멀티비타민 웰플러스로
건강을 PLUS+하세요!



우리가족 건강 지킴이
하루에 한 알 WELL PLUS+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미네랄 보충용 제품) 1,250mg x 60정 (1병 2개월 분량), 1일 1정을 씹어서 섭취(혼합 베리맛)



※특정원료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질병치료나 약물투여 중인 분들은 섭취전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본 제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닙니다.

구입문의 1588-8529